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1200만원 기부한 경우 60만원 더 공제해준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들의 신청하는 대표적 개별 공제 중 하나이며 1천만원을 기준으로 2단계 누진 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율이 지난해보다 5%p 늘어났는데,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다.

예를 들어 1200만원 기부했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200만원(20%)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전체 기부금 12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해서는 35%, 7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총 공제액은 27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에서는 210만원이기에 올해는 60만원의 추가공제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기부금이 고액일수록 실질 공제율은 35.0%로 수렴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200만원(20%)로 동일하지만, 전체 기부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350만원(3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총 공제액은 550만원이다.

기부금 1200만원 중 실질 공제율은 22.5%(270만원/1200만원)이지만, 기부금 2000만원의 공제율은 27.5%(550만원/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1억 기부의 경우 실질 공제율은 33.5%로 올라간다.

공제액이 커질수록 2단계 누진공제 형태에 따라 실질 공제율은 35.0%쪽으로 이동하게 되며(완전히 35.0%에 붙지는 않음) 저액공제가 주류를 이루는 일반 근로자들보다 최상단의 고액기부자들에 대한 체감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 상증세 유예로 착각하면 가산세 폭탄

올해 부과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3년도로 유예됐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예대상이 아니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관련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고시 거래소) 4곳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지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기에 가상자산 양도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등록이 된 거래소로 다른 거래소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원화 인출이 가능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에 대표성이 있다.

국세청, 내년 상속증여한 가상자산 과세... 새 평가방법 고시

국세청이 28일 내년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고시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3년 이후로 미뤄졌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이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인지 고시 거래소 외 가상자산인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고시 거래소 내 가상자산이라면, 상속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고시 거래소 외 거래소의 가상자산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공시한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가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고시 거래소 내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은 각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내년 3월 홈택스 조회/발급 이하 기타조회 항목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라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